

# 사회탐구 영역(정치와 법)

제 4 교시

성명

수험 번호

3

제 [ ] 선택

1

1. 정치를 바라보는 갑, 을의 관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교사: 배드민턴 동호회에서 연습 장소 선정을 둘러싼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회의를 하는 것을 정치로 볼 수 있을까요?  
 갑: 정치로 볼 수 없습니다. 정치는 정치권력의 획득·유지·행사와 관련된 국가 고유의 활동이기 때문입니다.  
 을: 정치로 볼 수 있습니다. 정치는 국가뿐만 아니라 배드민턴 동호회를 포함한 모든 사회 집단에서 이해관계의 대립과 갈등을 조정하고 해결하는 활동이기 때문입니다.

- ① 갑의 관점은 국가 형성 이전의 정치 현상을 설명하기에 적합하다.
- ② 을의 관점은 다원화된 현대 사회의 정치 현상을 설명하기에 적합하다.
- ③ 갑의 관점과 달리 을의 관점은 소수의 통치 엘리트에 의해서만 정치가 이루어진다고 본다.
- ④ 을의 관점과 달리 갑의 관점은 사회적 최소가치를 배분하는 활동의 주체가 다양하다고 본다.
- ⑤ 갑, 을의 관점 모두 회사 내 노사 간 임금 협상 과정을 정치로 본다.

2. 정치 참여 집단 A ~ C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 ~ C는 각각 정당, 이익 집단, 시민 단체 중 하나임.)



A는 의회 의원 선거를 앞두고 공공 의료 복지 제도 지원을 위한 예산 확보를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이에 국민의 건강 증진이라는 공익 추구를 위해 모인 B는 A의 공약을 지지하고 국민의 의료비 지원 확대를 촉구하는 캠페인을 펼쳤습니다. 한편, 민간 의료 업체의 종사자들로 구성된 C는 A의 공약이 정책으로 실현되면 자신들이 운영하는 업체의 수익성이 떨어질 수 있다며 해당 공약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 ① A는 특수한 이익의 실현을 중시한다.
- ② B는 정권을 획득하여 정당을 실현하고자 한다.
- ③ C는 행정부와 의회를 매개하는 역할을 한다.
- ④ A, C와 달리 B는 정치권력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기능을 한다.
- ⑤ B, C와 달리 A는 정치적 책임을 진다.

3. 우리나라 헌법의 기본 원리 A, B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우리나라는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보장을 위한 국가의 역할을 강조하는 A를 실현하기 위해 사회 보험, 공공 부조, 사회 서비스 등 다양한 사회 보장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는 국가 의사를 결정하는 최고의 권력이 국민에게 있다는 B를 실현하기 위해 보통 선거를 실시하고, 국민 투표권을 보장하고 있다.

- ① A는 실질적 평등의 실현을 추구한다.
- ② B는 국가가 문화를 형성하고 보호하는 근거가 된다.
- ③ A와 달리 B는 법률 제정과 정책 결정의 방향을 제시한다.
- ④ B와 달리 A는 정당 활동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근거가 된다.
- ⑤ A, B 모두 근대 입헌주의 헌법에서부터 강조되었던 원리이다.

4. 기본권 유형 A, B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형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다는 이유로 지방 자치 단체장의 직무를 정지시키고 무단체장으로 하여금 권한을 대행하도록 규정한 ○○법 조항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헌법 재판소가 결정하였다. 헌법 재판소는 해당 조항이 지방 자치 단체장인 자의 국가 및 공공 단체의 직무를 담당할 수 있는 권리인 A를 침해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국회의원과 달리 지방 자치 단체장에 한하여 이러한 불이익을 가하는 것은 국가로부터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인 B를 침해한다고 판단하였다.

- ① A는 소극적이고 방어적인 권리이다.
- ② B는 다른 기본권 보장의 전제가 되는 권리이다.
- ③ A와 달리 B는 법률에 의해 제한될 수 있는 권리이다.
- ④ B와 달리 A는 기본권을 실현하기 위한 절차적 권리이다.
- ⑤ A, B 모두 자본주의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등장한 권리이다.

5.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 및 추론으로 옳은 것은? [3점]

갑국 ~ 병국은 전형적인 정부 형태 중 하나를 채택하고 있다. 갑국 ~ 병국 모두 무소속 의원은 존재하지 않으며, 행정부 수반이 소속된 정당의 의회 의석률은 갑국 60%, 을국 35%, 병국 45%이다. 표는 [질문1]과 [질문2]에 대해 '예', '아니오' 중 같은 답변에 해당하는 국가끼리 묶은 것을 나타낸다.

[질문1] 행정부 수반이 국가 원수의 지위를 가지는가?	갑국 을국    병국
[질문2] 의회 내 과반 의석을 확보한 정당이 존재하는가?	갑국 을국    병국

- ① 갑국에서 내각의 존립은 의회의 신임에 의존한다.
- ② 을국의 행정부는 의회에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 ③ 갑국에 비해 병국에서는 행정부 수반이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
- ④ 을국과 달리 갑국에서는 의회가 행정부 수반에 대한 탄핵 소추권을 가진다.
- ⑤ 병국과 달리 을국에서는 행정부 수반의 임기가 보장되지 않는다.

## 2 (정치와 법)

# 사회탐구 영역

6. 우리나라 헌법 기관 A ~ D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국정 감사 및 조사를 통해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A는 회기 중 기간을 정하여 행정부를 상대로 국정 전반에 대해 질문할 수 있다. 행정부 최고 심의 기관인 B는 의장인 C, 부의장인 D, 국무 위원으로 구성되는데, D와 국무 위원은 A의 요구가 있을 때 출석하여 답변하여야 한다. 한편 C는 A에 출석하여 발언하거나 서한으로 의견을 표시할 수 있다.

- ① A는 조약 체결에 대한 비준권을 가진다.
- ② B는 국가 기관 상호 간의 권한 쟁의에 대한 심판권을 가진다.
- ③ D는 긴급 명령권을 가진다.
- ④ B는 C 소속의 기관으로 공무원의 직무에 대한 감찰을 담당한다.
- ⑤ A, D 모두 국무 위원의 해임을 C에게 건의할 수 있다.

7. 밑줄 친 ㉠ ~ ㉣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일회용 컵 과다 사용으로 인한 환경 문제가 심각하다는 ㉠ 언론 보도, 정책 마련을 촉구하는 일부 시민들의 ㉡ 온라인 서명 운동 등 일회용 컵 사용 제한에 관한 각종 사회적 요구가 표출되었다. 이후 ㉢ 국회의 입법 과정을 거쳐, 판매자는 보증금을 제품 가격에 반영하고 소비자는 컵을 반환함으로써 해당 비용을 돌려받는 내용이 포함된 ㉣ 법률이 시행되었다. 이에 일부 자영업자들은 해당 법률로 인해 매출에 타격을 입는다고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 보 기 >

ㄱ. ㉡은 정치 참여의 공간적 제약을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이다.  
 ㄴ. ㉢은 정치 과정에서 투입에 해당한다.  
 ㄷ. ㉠과 달리 ㉢은 정책 결정 기구에 해당한다.  
 ㄹ. ㉡과 달리 ㉣은 정치 외적 요소인 경제, 사회, 문화의 영향을 받는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8. A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위원회는 소프트웨어 구독 서비스를 취소하더라도 요금을 전혀 환불하지 않거나, 잔여 약정 의무액의 50%만 환불하는 약관 조항을 시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내용을 정하고 있는 해당 약관 조항이 무효라고 판단한 것으로 민법의 기본 원칙 중 A가 적용된 것입니다.



- ① 자신의 고의나 과실에 따른 행위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만 책임을 진다는 원칙이다.
- ② 개인의 소유권이 국가나 다른 개인으로부터 침해될 수 없는 절대적 권리라고 보는 원칙이다.
- ③ 개인은 자신의 소유 재산을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도록 사용·수익 또는 처분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 ④ 사회 질서에 반하거나 현저히 공정성을 잃은 내용의 계약은 법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원칙이다.
- ⑤ 타인의 손해에 대하여 직접적인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일정한 요건에 따라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원칙이다.

9. 다음 자료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3점]

○ 국회 의원 갑이 방송사 인터뷰를 통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 시키자 ○○ 지방 법원 합의부는 갑의 손해 배상 책임을 인정하였다. 이에 갑은 자신의 행위가 국회 의원의 직무상 발언에 해당한다며 항소하였지만, A는 갑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 국회 의원 을은 자신의 배우자가 공직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되어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국회 의원 선거 후보자의 배우자가 선거 범죄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그 후보자의 당선을 무효로 하는 공직 선거법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B에 헌법 소원 심판을 청구하였다.  
 ○ 국회 의원 선거에서 낙선한 병은 선거 과정에서 부정한 조작이 있었다며 당해 선거구 선거 관리 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선거 무효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C는 이를 기각하였다.

- ① A는 갑의 행위가 국회 의원의 면책 특권 대상이 되는 행위라고 인정하였다.
- ② 을은 B에 위헌 심사형 헌법 소원 심판을 청구하였다.
- ③ B는 대통령 선거의 효력을 다투는 선거 소송을 관할한다.
- ④ 병은 C의 판결에 불복하여 B에 상소할 수 있다.
- ⑤ A, C 모두 명령이나 규칙이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 이를 심사할 수 있다.

10. 다음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3점]

의료 사업을 하는 ○○ 법인에서 수간호사로 근무하던 갑은 '노동조합 티셔츠 입기'에 참여한 후 주간 근무를 하는 수간호사에서 3교대 근무를 하는 평간호사로 배치전환되었다. 갑은 사용자가 자신에게 행한 배치전환은 그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지 않고 야간 근무로 인한 불이익이 상당하여 부당한 배치전환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준 것이므로 부당 노동 행위에 해당한다며 □□ 지방 노동 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하였다. 이에 □□ 지방 노동 위원회는 해당 배치전환이 부당한 배치전환임을 인정하여 갑을 수간호사에 복직시키라고 판정하였지만, 갑의 부당 노동 행위 구제 신청은 기각하였다. 이에 갑과 을은 각각 중앙 노동 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 노동 위원회는 갑의 재심 신청은 인용하고 을의 재심 신청은 기각하였다.

\* 배치전환: 근로자의 직무 내용(직종) 또는 근무 장소를 변경하는 인사 이동

- ① 갑이 소속된 노동조합은 부당 노동 행위를 이유로 □□ 지방 노동 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는 당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② 갑은 노동 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하는 것과 별도로 을을 상대로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③ □□ 지방 노동 위원회와 달리 중앙 노동 위원회는 을이 갑의 근로 3권을 침해하였다고 판단하였다.
- ④ 중앙 노동 위원회와 달리 □□ 지방 노동 위원회는 을이 갑에게 행한 배치전환은 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 ⑤ 을이 재심 판정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한 경우, 해당 소송은 단심제가 적용된다.



11. 밑줄 친 ㉠ ~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도 환경 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심사 보고서

본 조례안은 ㉠○○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도 의회 △△위원회  
에 회부된 안건임.

■ 주요 내용  
환경 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하는 사항을 정하고, 환경 친화적  
자동차 충전 시설 기준을 강화하고 전용 주차 구역 기준을 신설함.

- ① ㉠은 지방 자치 단체의 예산을 심의하고 확정한다.
- ② ㉡은 지방 자치 단체의 의결 기관이다.
- ③ 주민은 주민 투표를 거쳐야 ㉢의 개정을 청구할 수 있다.
- ④ ㉠과 달리 ㉡은 지방 자치 단체의 사무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 ⑤ ㉠은 지방 자치 단체의 사무에 관한 감사·조사권으로 ㉡을 견제할 수 있다.

12. 다음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갑(17세)은 을(30세)이 운영하는 매장에서 무료로 진행되는  
화장품 체험을 받아 보았다. 다음날 갑은 다시 매장에 방문하여  
법정 대리인 병의 동의를 얻지 않고 고가의 화장품 매매 계약을  
을과 체결하였다. 계약 체결 당시 을은 갑이 미성년자임을 몰랐다.

- ① 갑과 을의 매매 계약 내용에 따른 권리와 의무는 병에게 있다.
- ② 갑은 병의 동의를 얻어야만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 ③ 을은 갑에게 매매 계약을 취소할 것인지 확인을 촉구할 수 있다.
- ④ 을은 병의 추인이 있기 전까지 매매 계약 체결의 의사 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 ⑤ 갑이 신분증을 위조하여 자신을 성년자로 믿게 하였더라도 병은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13. 밑줄 친 'A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007년 2월부터 4월까지 게임 머니 환전을 통해 수익을 올리던  
갑은 2007년 1월 개정된 ○○법 위반으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다. 이에 갑은 항소하였고 기각되자 상고하였다.  
상고심 법원은 ○○법 조항과 2007년 5월 개정·시행된 ○○법  
시행령 조항 및 부칙에 의해 게임 머니를 환전하는 영업 행위가  
처벌되는 것이므로 갑이 시행일 이전에 게임 머니를 환전한 영업  
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죄형 법정주의의 A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하였다.

- ① 형벌 법규의 소급 입법 및 소급 적용을 금지하는 원칙이다.
- ② 관습법에 의하여 새로운 구성 요건을 창설하는 것을 금지하는 원칙이다.
- ③ 범죄로 규정되는 행위와 이에 대한 형사 책임 사이에 적절한 균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이다.
- ④ 법률에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해서 그것과 유사한 성질을 가지는 사항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원칙이다.
- ⑤ 법관의 자의적 해석이 허용되지 않도록 범죄의 구성 요건과 형사 제재에 관한 내용이 법률에 명확히 규정되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14. 다음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3점]

A는 B 소유의 건물을 임차하여 전동 키보드 대여 회사를 운영  
하고 있다. A의 회사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C가 전동 키보드  
운행 점검 도중 부주의로 행인 D를 치어 다치게 하였다. D는 이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고 병원을 다니며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한편, A가 임차한 B 소유 건물 외벽이 설치상의 하자로  
허물어져 행인 E가 다쳤고, 사고를 수습하던 A는 F가 행사에  
쓰려고 A에게 주문한 전동 키보드를 행사 당일에 배달하지 못했다.

- ① C에게 고의가 없다면 C는 D에게 불법 행위 책임을 지지 않는다.
- ② A와 C는 D에게 공동 불법 행위자의 책임을 진다.
- ③ A가 D에 대해 재산상의 손해를 배상한 경우, D는 A에게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는 청구할 수 없다.
- ④ A에게 E에 대한 손해 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B는 E에게 무과실 책임을 진다.
- ⑤ B에게 공작물 소유자의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B는 F에게 채무 불이행 책임을 진다.

15. 다음 자료에 대한 옳은 분석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갑국의 의회 의원 정수(定數)는 17명이며, 이 중 지역구 의원은 8명  
이고, 비례 대표 의원은 9명이다. 유권자는 지역구 의원 선출을 위해  
후보자에게 1표, 비례 대표 의원 선출을 위해 정당에 1표를 행사한다.  
지역구 의원 선거에서는 선거구별 2인의 의원을 단순 다수 대표제로  
선출하며, 각 정당은 선거구별 1인의 후보자를 공천한다. 비례 대표 의원  
선거에서는 전국을 하나의 선거구로 하여 정당 명부식 비례 대표제로  
당선자를 결정한다. 비례 대표 의석 배분은 의석 할당 정당 득표율에  
비례 대표 의원 정수를 곱하여 산출된 수의 정수(整數)만큼 의석을 각  
의석 할당 정당에 배분한다. 이후 잔여 의석은 소수점 이하의 수가 큰  
순서대로 각 의석 할당 정당에 1석씩 배분한다. 단, 의석 할당 정당은  
전체 투표 총수의 15% 이상을 득표한 정당을 의미한다. 표는 최근  
갑국의 의회 의원 선거 정당별 득표 결과를 나타낸다.

(단위: %)

선거구 (유권자 수)	지역구 의원 선거 결과				비례 대표 의원 선거 결과			
	A당	B당	C당	D당	A당	B당	C당	D당
가 (500명)	30	40	20	10	40	30	20	10
나 (1,000명)	30	10	40	20	30	20	40	10
다 (1,000명)	40	30	20	10	40	20	30	10
라 (500명)	40	20	10	30	40	30	20	10

\* 의석 할당 정당 득표율(%) =  $\frac{\text{의석 할당 정당의 득표수}}{\text{모든 의석 할당 정당의 득표수 합}} \times 100$   
\*\* 투표율은 100%이며, 무효표는 없음.

< 보기 >

- ㄱ. 지역구 의원 선거에서 동일 선거구 내 당선자 간 표의 등가성 문제가 발생한다.
- ㄴ. A당의 총의석률은 지역구 의석률보다 높다.
- ㄷ. D당의 총의석수는 2석이다.
- ㄹ. B당과 달리 C당은 의석 할당 정당 득표율과 비례 대표 의석률이 같다.

-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ㄷ
-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 4 (정치와 법)

# 사회탐구 영역

16. 다음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갑(남)과 을(여)은 A, B를 낳고 살다가 을의 부정행위로 인해 법원 판결을 받아 이혼하였고, A는 갑이, B는 을이 양육하기로 하였다. 몇 년 후 갑과 재혼한 병은 A를 친양자로 입양하였고, 을은 사실혼 관계인 정과의 사이에서 C를 출산하였다. 을은 어느 날 갑작스럽게 사망하였는데, 자신의 전 재산을 B에게 준다는 내용의 유언장이 발견되었다.

- ① 을은 이혼 시 혼인 중 공동으로 마련한 재산에 대해 재산 분할을 청구할 수 없다.
- ② 갑과 을은 3개월의 이혼 숙려 기간을 거쳐 이혼하였다.
- ③ 입양된 A는 갑과 병의 혼인 중 출생자로 간주된다.
- ④ C와 달리 B는 을의 법정 상속인이다.
- ⑤ 을의 유언이 유효하다면, 정은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다.

17. 국제 연합의 주요 기관 A, B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A에서 갑국은 자국의 이해관계와 관련된 결의안에 14개국 찬성하였음에도 단독으로 반대를 표명하여 부결시켰다. 한편 모든 회원국이 참여하는 B에서 A의 이사국으로 수차례 선출된 을국은, A에서의 의사 결정 방식을 바꾸자는 주장을 지속적으로 제기하였다. 최근 A의 의결 과정에서 거부권이 행사되는 것을 제약하기 위한 ㉠ 결의안이 B에서 논의되고 있다.

- ① A에서 갑국은 상임 이사국, 을국은 비상임 이사국이다.
- ② ㉠이 절차 사항을 제외한 안건이라면, B에서 이를 채택하기 위해 상임 이사국 5개국을 포함한 9개국의 찬성이 필요하다.
- ③ A와 달리 B는 국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군사적 개입을 결정할 수 있다.
- ④ A와 달리 B는 국제 평화와 안전 유지에 관한 국제 연합의 실질적 의사 결정 기관이다.
- ⑤ B와 달리 A는 국제 사법 재판소의 재판관 선출에 관한 권한을 가진다.

18. 국제 관계를 바라보는 관점 A, B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A는 국가를 보편적 선에 따라 도덕적 판단이 가능한 존재로 인식하며, 국가 간의 이해관계를 국제법과 제도를 통해 조율함으로써 국제 평화가 유지될 수 있다고 본다. 반면 B는 권력을 추구하는 본성을 가진 인간의 집합체인 국가는 국제 관계에서 국력 증대를 위한 투쟁을 이어가게 되며, 특정 국가나 동맹이 압도적인 힘의 우위를 가지지 못하도록 힘의 균형을 확보해야 국제 평화가 유지될 수 있다고 본다.

- ① A는 국제 사회에서 나타나는 국가 간 상호 의존적 관계를 간과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 ② B는 국제 사회에서 국가는 자국의 이익을 배타적으로 추구한다고 본다.
- ③ A와 달리 B는 국제 사회의 갈등 해결을 위한 국제기구의 역할을 중시한다.
- ④ B와 달리 A는 주권 국가에게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중앙 정부가 국제 사회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본다.
- ⑤ A, B 모두 전쟁을 억제하기 위해 집단 안보 체제 구축이 필수적이라고 본다.

19. 다음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3점]

갑은 순찰 중이던 경찰관 을로부터 불심 검문을 당하자, 인근 주민들에게 들릴 정도로 욕을 하여 을을 모욕하였다. 을은 갑을 모욕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했으나 갑은 체포를 면하려고 반항하는 과정에서 을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 이후 갑은 모욕죄, 공무 집행 방해죄 및 상해죄로 기소되었다. 이에 대해 법원은 갑의 욕설이 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행위에 해당한다며 갑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하였다. 다만, 공무 집행 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 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는데, 을이 현장에서 갑을 체포할 당시 갑에게 도망 또는 증거 인멸의 염려가 없었으므로 을의 체포 행위를 적법한 공무 집행이라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갑이 반항하는 과정에서 을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불법 체포로 인한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기 위한 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하였다.

- ① 법원은 모욕죄에 대해 갑의 정당 행위를 인정하여 객관적인 법질서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 ② 법원은 공무 집행 방해죄에 대해 갑의 긴급 피난을 인정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하였다.
- ③ 법원은 상해죄에 대해 갑의 정당방위를 인정하여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 ④ 법원은 상해죄와 달리 공무 집행 방해죄에 대해 갑에게 가해지는 법적 비난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 ⑤ 법원은 갑이 모욕죄, 공무 집행 방해죄, 상해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모두 하였다고 판단하였다.

20. 다음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3점]

갑은 을에게 예전에 빌려 간 돈을 갚을 것을 요구하였으나 을이 이를 거부하자 을을 밀치는 폭행을 가하였고, 을은 뒤로 넘어지면서 머리 부분을 울타리 벽과 도로의 바닥에 부딪쳐 의식을 잃고 사망하였다. 이에 갑은 기소되었고 갑에 대한 국민 참여 재판이 실시되었다. 국민 참여 재판 결과 1심 법원은 갑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였다. 이에 불복한 갑은 자신의 폭행으로 을이 사망한 것은 아니고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하였다. 2심 법원은 폭행 치사의 공소 사실은 무죄이나 공소 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폭행죄는 유죄라고 판단하였다. 이에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갑에게 징역 1년에 집행 유예 2년을 선고하였고 해당 판결은 확정되었다.

- ① 1심 법원은 갑에게 노역은 부과되지 않지만 신체의 자유가 박탈되는 형벌을 선고하였다.
- ② 1심 법원의 선고 이후 갑에게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 ③ 2심 법원은 갑에게 선고의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 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 ④ 지방 법원 합의부가 갑에게 내린 판결이 확정되었다.
- ⑤ 을의 유족은 배상 명령 제도를 통해 국가로부터 범죄 피해 구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십시오.